민주 "명태균 특검법 이달 처리… 내란 전모 밝혀야"

박찬대 "명 게이트, 계엄 배경 지목"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규명
마약수사 의혹 상설특검도 발의
김건희 의혹 상설특검 추진 검토

서영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야6당 의원들이 11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별검사법'과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며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마약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이를 수사하던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경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행해졌다"며 "(압력을 가한) 그중 한명인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무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징계 무마 등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매우 짙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명씨 관련 내용은 특검으로 따로 떼고, 그외 나머지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원내에서 판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부결·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아무 걱정 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는 11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달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하자, 이 대표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는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며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부 불만도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비명계)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찾아서 역할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며 "(당내)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담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을 두고 '도로 좌클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총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계도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동시간 변형)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신원식 "尹 '비상한 조치 필요' 언급… 계엄은 반대"

헌재,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이 '비상한 조치' 발언이 있었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떤 경우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에 삼청동 안가에서 연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수긍한 것으로 읽힌다.

신 실장은 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자신을 비롯한 수석들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쪽지를 본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과 경찰에 대해 지시·지휘 권한 역시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3분여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단전·단수가 아닌 안전을 위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이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본 쪽지 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이 나서 단전단수를 무작정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게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물어봤다. 이후 쪽지 생각이 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에 출석한 허 청장이 이 전 장관에게 계엄 당일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는, "지시하는 뉘앙스였다고 애매하게 표현했다"고 발언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오미화 "전남형 기본소득, 재원 확보·공감대 부족"

오미화 전남도의원(진보당·영광2·사진)가 전남도의 2025년도 역점시책 1번으로 선정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38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본소득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전남형 기본소득이 전남 지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 사업 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오는 상황에서 이전 출생 수당 준비와 비교해 볼 때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예산이 세워진 후 내부적인 논의만 이뤄졌을 뿐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련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추경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오지현 기자

권성동 "민생 추경 편성 필요…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올해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친 비판도 상당 부분 할애했다.

그는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